

COMMENT

7급 선행정학 95% 적중

이번 지방7급 지방자치론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기출문제와 신경향 문제의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으며 기본적인 문제와 지엽적인 문제, 암기와 이해를 요하는 문제의 출제비율도 적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론은 그 특성상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법령조문을 근거로 지엽적인 문제가 난이도 조절차원에서 출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출제는 이론문제와 법령문제가 적정한 비율을 갖췄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난이도가 약간 있는 지엽적인 문제로는 문14(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문제), 문17(행정안전부장관 승인사항), 문20(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었습니다.

지방자치론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도 7급 선행정학 커리에 따라 준비한 수험생이라도 충분히 문20을 제외하고는 모두 풀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95점 이상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문20 같은 문제는 지방자치론을 별도로 공부한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풀기 힘든 문제였으므로 결국 지방자치론은 별도로 힘들게 따로 공부하려고 하기보다 행정학으로 동시에 커버가 되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저희 7급선행정학은 9급은 물론 타 수업과는 차별화된 수업으로 지방자치론 부분을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기 때문에 지방자치론을 따로(별도의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90점 이상 고득점이 보장되는 일석이조(행정학과 지방자치론을 다 잡을 수 있는)

의 교재(강의)라는 점이 이번에도 여실히 입증된 셈입니다.

코로나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군분투하신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결과는 과정을 속이지 못합니다.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며 이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일들 해가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단체자치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불린다.
- ② 주민자치 개념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주로 개별적 수권 방식을 채택하였다.
- ③ 단체자치는 일정 지역 내의 행정이 주민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실질적 요소이다.
- ④ 주민자치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태를 뜻하며, 법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2021 7급 선행정학 p.780

정답 및 해설

답 ②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상반되는 특징을 숙지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대륙계 단체자치국가는 포괄적 예시를 통해 불분명하게 사무를 배분하고, 영미계 주민자치국가는 개별적 수권(지정)을 통해 명확하게 사무를 배분한다.

- ☑ ① [×]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이다. 단체자치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계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한 제도적 의미의 자치이다.
- ③ [×]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이다. 단체자치가 '중앙집권'을 중시한다면 주민자치는 '분권'을 강조하고, 단체자치가 제도적 '분권'을 강조한다면 주민자치는 실질적 '참여'를 강조한다.
- ④ [×] 자치단체에 의한 법적·제도적 의미의 자치는 단체자치, 주민에 의한 정치적 의미의 자치는 주민자치이다.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구분	주민자치	단체자치
의미	정치적 의미(민주주의)	법률적 의미(지방분권)
국가	영국·미국	독일·프랑스·일본
자치권의 인식	자연적·천부적 권리(고유권설)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전래권설)
자치의 중점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주민에 의한 행정)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자치단체에 의한 행정)
사무의 구분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분 없음 (위임사무 부존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권한부여방식	개별적 수권(지정)주의	포괄적 수권(예시) 주의
중앙통제	약함(입법적·사법적 통제 위주)	엄함(행정적 통제)
조세제도	독립세(자치단체가 과세주체)	부가세(국가가 과세주체)
민주주의와 관계	상관관계 인정	상관관계 부정
지방정부형태	기관통합형(의원내각제식)	기관대립형(대통령제식)
자치단체의 지위	순수한 자치단체	이종적 지위 (자치단체 + 일선기관)
통제	주민통제(아래로부터의 통제)	중앙통제(위로부터의 통제)

02 중요도 ■■■ 난이도 ■■■□

2020 지방7급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영국의 의회형을 예로 들 수 있다.
- ② 의원내각제가 발달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통합형에 해당한다.
- ③ 기관대립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집행기관의 장은 주로 의회에서 선임한다.
- ④ 위원회 형태의 미국 지방자치단체와 참사회·이사회 형태의 독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

2021 7급 선행정학 p.810

정답 및 해설

답 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면 대륙계 기관대립형, 통합 혹은 유기적 협조를 유지하면 영미계 기관통합형이다. 기관통합형은 지방의회 중심으로 지방행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 ☑ ② [×] 일본은 의회에 입법권을, 수장(단체장)에게 집행권을 각각 부여하는 대표적인 대륙계 전통의 기관대립형 국가이다.
- ③ [×] 집행기관 장의 선출방식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기관대립형에서는 단체장을 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기관통합형에서는 주로 의회에서 선임된다.
- ④ [×] 미국 카운티의 위원회형 지방정부는 기관통합형의 한 유형이다.

각국의 지방정부 형태

기관 통합형	의회형	미국(카운티)	주민직선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입법권과 행정권 행사
	의회형	영국 등	의회가 입법과 집행기능 관장(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
	의회-의장형	프랑스	의회의장이 집행기관장 겸직하면서 사무조직 통솔(1982년 이후)
기관 대립형	의회-수장형	독일, 일본, 미국(일부), 우리나라 등	의회는 입법권, 수장은 집행권을 가지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강시장형과 약시장형이 있음)

03 중요도 ■■■ 난이도 ■■■□

2020 지방7급 지방자치론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건소 운영, 시·군의 도세징수 등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가 같이 걸린 사무들이 많다.
- ② 자치사무와의 구별이 명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
- ③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단체위임사무에 비하여 자치적 처리의 영역이 넓다.

2021 7급 선행정학 p.830

정답 및 해설

답 ③

기관위임사무는 주로 국가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무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사무로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 ① [×]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이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적 이해가 주로 걸린 사무이다.
- ② [×] 우리나라의 사무 구분은 명확하지 못한 편이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상 예시규정이 구속력이 없는 예시규정인데다가 국가적 이해관계가 높은지 지방적 이해관계가 높은지 자체가 너무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기관위임사무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법」상 예시된 자치사무의 대부분이 사실상 기관위임사무(예 : 가족관계등록사무)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 실질적으로는 기관위임사무가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무의 구분이나 비중이 명확해진 않지만 최근 학자들 사이에서는 자치사무가 50~60%, 기관위임사무가 30~40%, 단체위임사무가 10% 정도 차지한다는 설명이 대중을 이룬다(김병준, 2017, 지방자치론).
- ④ [×] 자치적 처리 영역이 넓은 사무는 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순이다.

지방자치 관계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대한 결권을 갖는다.
- ②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④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한다.

2021 7급 선행정학 p.819

정답 및 해설

답 ③

상급자치단체장이 하급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 것은 자치단체 장이 갖는 포괄적인 관리집행권, 지휘감독권에 비추어볼 때 가능하다.

- ☑ ① [×] 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다.
- ② [×] 자치단체 장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맞으나, 조례로 부과 가능한 과태료는 **천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 ④ [×] 소방은 경찰과 업무소관이 유사하다. ① **소방직 신분**은 전원 국가직화 되었으나(2020.4.1.), ② **기구(소방본부, 소방서)**는 시·도지사 소속이고, ③ **소방업무**는 시·도지사 지휘·감독, 대형재난이나 인사 등은 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즉, **기초자치단체장은 지휘·감독권이 없다**(소방직의 국가직화와 관련하여 소방기구의 성격에 대하여 수업 때 자주 강조했던 내용이다).

☑ **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및 국가의 감독과 통제

구분	지방의회 관여여부	조례제정 여부	이해관계	경비부담	보조금	예	중앙통제		
							예방적 통제	사후적 통제	
								합목적성	합법성
고유사무	○	○	지방	지방	장려적 보조금 (일부) ²⁾	① 자치단체 존립·유지사무(조례·규칙제정 등) ② 주민복지사무(상하수, 소방 ³⁾ , 시장, 도서관, 학교, 병원, 도로, 주택, 쓰레기, 교통, 도시계획)	×	×	○ ⁴⁾
위 임 사 무	단체위임 사무	○	○	국가+지방	국가+지방 부담금 (일부)	보건소,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도세징수, 공과금 징수, 직할하천 정용료 징수, 직업안정, 하천유지보수, 국도유지보수 등	×	○	○
	기관위임 사무	×	×	국가	국가 위탁금 (전액)	국회의원 선거, 근로기준 설정, 의약사 면허, 도량형, 외국인 등록, 대통령선거, 여권발급, 부랑인 선도, 교원능력평가 등	○	○	○

- 1) 자치단체의 사무라 하면 좁게는(지방자치법상)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만을 말한다.
- 2) 고유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장려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 3) 소방사무의 경우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획·예산은 국가사무, 지역내 소방·구조·구난은 시·도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다.
- 4)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감사는 위법한 경우에 한한다.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경합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정수요의 충족이 불가능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순으로 행정수요의 충족 책임이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 ②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경제성의 원칙 또는 효율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 ③ 보충성의 원칙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다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정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④ 포괄성의 원칙은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2021 7급 선행정학 p.790

정답 및 해설

답 ④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을 묻는 문제이다. 포괄성의 원칙이란 단위사무 중심의 단편적 이양 대신 연관된 중·대단위 사무까지 포괄적으로 이양한다는 원칙이다.

- ① [×] 비경합성이 아니라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② [×] 경제성의 원칙이 아니라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경제성의 원칙이란 어느 자치계층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 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무는 기초단체 우선 → 광역단체 → 중앙정부 순으로 배분한다는 원칙이다. 광역과 기초간에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비경합성의 원칙**이다.

지방사무 배분의 주요 원칙

선분권 · 후보완	지방분권으로 문제가 예상되어도 일단 분권을 하고 부작용은 추후 지방정부가 자정능력으로 보완
보충성	주민생활과 가까운 민간이나 정부에 사무의 우선적 관할을 인정(기초단체 → 광역단체 → 중앙정부 순)
포괄성	단위사무 중심의 단편적 이양 대신 연관된 업무는 함께 중·대단위 사무로 포괄적 이양
비경합성	책임이 명확하도록 이중배분 금지
경제성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단위에 배분
종합성	일선기관보다는 자치단체 우선의 원칙(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정비의 원칙)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재정 균형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종류가 있다.
- ③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한다.
- ④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입액을 산정할 때 기초 수입액은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 총액의 95%를 반영한다.

2021 7급 선행정학 p.853

정답 및 해설

답 ④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인구기준으로 산정)에 미달될 경우, 즉 재정력지수가 1 이하인 경우에 교부된다. 「지방교부세법」 제8조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 ① [○] 지방교부세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격차) 시정이 목적이다.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라면, 교부세는 국가와 지방간, 자치단체 상호간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이다.
- ② [○] 지방교부세의 네 가지 종류(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를 옳게 설명하고 있다.
- ③ [○] 부동산교부세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한다.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 청구요건, 효력 등에 관한 상세규정을 두고 있다.
- ②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조례의 제정 및 폐쇄 청구제도는 주민발안에 해당한다.
- ④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회유(placation)는 비참여에 해당한다.

2021 7급 선행정학 p.860

정답 및 해설

답 ③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발안(간접발안)의 일종이다. 지역주민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의제도이다.

- ☑ ① [×] 주민투표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이 있다. 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할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청구요건·효력 등 투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 ② [×] 주민소송은 주민의 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요구한다.
- ④ [×] 비참여가 아니라 **형식적(상징적) 참여**에 해당한다.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①비참여는 조직, 치료, ②형식적 참여는 정보제공, 상담, 회유 ③**실질적 참여**는 동업, 위임, 통제를 의미한다.

Arnstein(1969)의 시민참여단계

1단계 (하위단계)	① 조작 (manipulation)	주민에 대한 일방적 설득이나 지시	실질적 비참여
	② 치유 (therapy)	주민요구 분출(치료) 수단	
2단계 (중간단계)	③ 정보제공 (informing)	일방적 홍보(매스컴 등이 수단)	상징적 참여
	④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 등으로 정보 제공 및 참여 유도	
	⑤ 회유 (유화) (placation)	주민의 영향력 약감 있음, 채택여부는 행정청이 결정	
3단계 (상위단계)	⑥ 동업자관계 (partnership)	주민이 지방의회에 맞서 협상 유도, 최종결정은 지방정부가 함	실질적 참여
	⑦ 주민권력위임 (delegated power)	주민이 우월한 입장, 행정청이 협상 유도	
	⑧ 시민통제 (citizen control)	시민이 위원회를 지배, 주민에 의한 완전자치	

지방교부세의 종류

종류	개념	재원	용도	
보통 교부세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 재정수요액)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내국세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97	일반 재원	
특별 교부세	①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시 교부	40/100	[내국세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3	특정 재원
	②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50/100		
	③ 국가적 장려, 국가와 지방 간 시급한 협력, 역점시책, 재정운용 실적 우수 시 등 교부	10/100		
소방안전 교부세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교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 정산액	특정 재원	
부동산 교부세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부	중부세 전액 + 정산액	일반 재원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의회 의장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 ③ 사무처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신분보장 등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2021 7급 선행정학 p.820

정답 및 해설

답 ②

「지방자치법」 제92조 제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 ① [○] 「지방자치법」 제91조 제1항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 ② [○] 「지방자치법」 제92조 제1항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④ [○] 「지방자치법」 제92조 제2항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정부 간 관계에 관한 로즈(Rhodes)의 권력의존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로 본다.
- ② 정책공동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정부 간 관계에서 교섭과 거래는 조직 간 자원 교환과정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 ④ 지방정부는 법률적 자원, 정보 자원, 물리적 자원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2021 7급 선행정학 p.795

정답 및 해설

답 ④

Rhodes의 전략적 협상관계모형은 권력의존모형 또는 상호의존모형이라고도 불린다. 이 모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법률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에 관해 우위를 점하고, 지방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에 관해 우위를 점한다.

- ① [○] 권력의존모형(전략적 협상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완전독립(동등)도, 예측도 아닌 상호의존관계이다. 따라서 정부가 보유하는 4가지 자원에도 상호우위가 있다.
- ②③ [○] Rhodes는 정부간 권력의존문제를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만 보지 않고 정책네트워크문제와 접목시킴으로써 자원의존관계를 가진 정책공동체나 이송공동체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 간 관계에서 교섭(협상)과 거래를 조직 간 자원 교환과정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Rhodes의 전략적 협상형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완전독립(동등)도, 예측도 아닌 상호의존관계로 정부가 보유하는 4가지 자원에도 상호우위가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 우위	지방정부 우위
① 법적 자원	① 정보자원
② 재정적 자원	② 조직자원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 ②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시작하였으나, 2014년부터 소선거구제로 전환되었다.
-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④ 광역의회의 지역구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2021 7급 선행정학 p.867

정답 및 해설

답 ④

우리나라의 경우 ①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가미, ②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2~4인)를 기본으로 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가미하여 선출하고 있다.

- ① [×] 「공직선거법」 개정(2005)으로 기초의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지방공무원은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이 인정된다.
- ② [×]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2~4인)를 기본으로 한다.
- ③ [×]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이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지역구의원 정수의 10/100)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제도

구분	기본원칙	가미
광역의회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가미
기초의회	중선거구제(2~4인)	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가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필요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제고
- ② 광역적 사무의 원활한 처리
- ③ 지방분권의 촉진
- ④ 행정 업무의 전문성 제고

2021 7급 선행정학 p.802

정답 및 해설

답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의 장단점에 관한 문제이다. 주민들의 참여와 통제에 의하여 책임성과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일선기관은 국가가 지방에 설치한 하급기관으로 주민에 의한 통제와 책임 확보가 곤란하다. 즉, 자치행정을 저해한다. 일선기관은 아무리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도 그 것은 지방분권(지방자치)이 아니라 중앙집권이다.

- ① [○] 일선기관은 통일적 기술·절차·장비의 전국적 활용을 통해 통일행정을 돕지만, 분야별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종합행정을 저해한다.
- ② [○] 일선기관은 관할범위가 자치단체보다 넓어 광역행정을 돕지만, 현지행정(주민접근성)을 저해한다.
- ④ [○] 일선기관은 내국세 징수, 출입국 관리, 병무, 근로조건 등 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전문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의 효용과 한계

국가가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의 하급기관으로 자치권, 법인격, 과세권이 없음

효용	한계
① 국가업무부담 경감	① 책임성의 결여와 자치행정 저해
② 지역별 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 근린행정	②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③ 신속한 업무처리 및 통일적 행정 수행	③ 고객의 혼란과 불편
④ 중앙과 지역 간 협력 및 광역행정의 수단	④ 종합행정 및 현지행정 저해
⑤ 전문행정 및 매개행정	⑤ 경비 증가 및 중앙통제의 강화 수단
	⑥ 자치단체와 수평적 협조 및 조정 곤란

12

중요도 ■■■ 난이도 ■■■□

2020 지방7급 지방자치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임의규정으로 강제력은 없으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광주광역시 북구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2021 7급 선행정학 p.736

정답 및 해설

답 ②

[시행은 의무, 반영은 재량] 단체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도는 의무화되어 있다. 즉, 단체장은 주민의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제도는 지방의회 중심의 간접민주주의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 ☑ ①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4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 의견서 첨부은 의무이나, 의견 반영은 재량이다.
- ④ [○]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여러 기초단체로 확대되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1) 의의

- ①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공식 참여 → 재정협치(Fiscal Governance)
- ② 성과를 중시하는 NPM보다 재정주권을 중시하는 Gov의 산물

(2) 도입

- ① 해외 :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시(1989)에서 세계 최초 도입
- ② 국내
 - 2004 광주광역시 북구(국내 최초)
 - 2006 「지방재정법」에 근거 마련(임의규정)
 - 2011 「지방재정법」상 의무화 → 제도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주민의견 반영 의무 X
 - 2018 중앙정부도 「국가재정법」상 의무화

13

중요도 ■□□ 난이도 ■■■□

2020 지방7급 지방자치론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② 교육감을 선출하는 주민직선제는 2002년부터 실시되었다.
- ③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감(교육행정)과 시·도지사(일반행정) 간에 지방교육관련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기관이다.
- ④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둔다.

2021 7급 선행정학 p.834

정답 및 해설

답 ②

시·도교육감을 2007년 이전에는 각급 학교 운영위원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하였으나 2007년부터 주민직선으로 전환되었다.

- ☑ ① [○] 「교육자치법」 제21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③ [○]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감(교육행정)과 시·도지사(일반행정) 간에 지방교육관련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기관이다.
- ④ [○] 교육행정의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으로 이루어진다(「교육자치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중요도 ■■■ □ □ □ 난이도 ■■■■

2020 지방7급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론 시·도지사도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도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때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은 규약에 포함된다.
- ④ 행정협의회 의회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2021 7급 선행정학 p.807

정답 및 해설

답 ④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2항(행정협의회)에 의하면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①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예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를 설립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의회의장 역시 가능하다.
- ③ [○] 협의회는 관계 자치단체가 협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각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설치와 규약을 고시해야 한다.

15

중요도 ■■■ □ □ □ 난이도 ■■■■

2020 지방7급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용도와 수행조건 등을 특정하지 않고 교부한다.
- ② 지방세 중 목적세로 분류되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시군세에 속한다.
- ③ 자치구 조정교부금 뿐 아니라 시·군 조정교부금도 이 전재원의 예이다.
- ④ 시·도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2021 7급 선행정학 p.872

정답 및 해설

답 ③

이전지출 또는 이전재원이란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는 금전적 이동을 말한다. 민간에 대한 이전지출로는 실업수당 등이 있고, 지방에 대한 이전지출로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이 있다.

- ☑ ① [×] 사용목적에 재량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의 성격이 강하다.
- ② [×] 지방세 중 목적세는 광역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다. 즉,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 혹은 특별시·광역시세이다.
- ④ [×] 예산안 제출·의결 기한은 다음과 같다.
 - ① 광역지자체 : 50일 전 제출, 15일 전 의결
 - ② 기초지자체 : 40일 전 제출, 10일 전 의결

사바스(Savas)가 제시하는 공공서비스의 네 가지 공급유형 중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A)'과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B)'의 예로 옳은 것은?

A	B
① 계약방식(contracting-out)	셀프 서비스(self service)
② 보조금 방식(granting)	계약방식(contracting-out)
③ 허가(franchises)	정부 간 협정
④ 이용권 지급(vouchers)	허가(franchises)

2021 7급 선행정학 p.71

정답 및 해설

답 ①

공급결정은 공급에 대한 결정과 책임, 생산·공급은 공급권을 부여 받아 서비스를 생산·전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공급을 "공급결정", 생산을 "공급"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계약방식은 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생산은 민간이 담당하는 방식이며, 자기생산(셀프서비스)은 민간이 공급을 결정하고 공급도 민간이 담당하는 형식에 해당한다.

공공서비스 공급방법(E.Savas)

Savas에 따르면 공급과 생산주체에 따른 공공서비스 공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공급(provide)	
	정부	민간
생산(produce)	① 정부서비스(직접 공급) ② 정부간 협약	① 정부판매
	① 민간계약(위탁) ② 독점허가(franchising) ③ 보조금(grant)	① 구매권(voucher) ② 시장(market) ③ 자기생산(self-service) ④ 자원봉사(voluntary)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방채 중 외채의 발행
- ㄴ. 시·도의 지방공사 설립
- ㄷ. 행정구의 명칭 변경과 읍·면·동의 구역 변경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2021 7급 선행정학 p.891

정답 및 해설

답 ①

지방채의 외채와 조합 발행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 ☑ ㄱ [○] 지방채의 외채발행, 조합발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 ㄴ [×]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사 설립은 광역단체장과의 협의, 광역단체의 지방공사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사항이다. 승인 사항이 아니다.
- ㄷ [×] 행정시·행정구·읍·면·동의 폐치·분합 명칭변경, 구역 변경은 조례에 의한다. 단, 하부행정기관의 폐치·분합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장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1 7급 선행정학 p.806

정답 및 해설

답 ①

지방분쟁조정위는 동일 시·도 내 기초단체 간 분쟁을, 중앙분쟁조정위는 시·도를 달리하는 기초단체 간, 광역과 기초단체 간, 광역과 광역단체 간 분쟁을 조정·결정한다.

- ☑ ② [×]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7항 :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③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4항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제도

지방정부 상호간	동일 시·도내 기초단체간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정·결정	① 구속력 있음 ② 직권조정 가능 ③ 필요예산 우선 편성
	광역과 기초단체간 시·도를 달리하는 기초단체 간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정·결정	④ 직무상 이행명령 ⑤ 행정대집행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국무총리소속 행정협외조정위원회에서 조정		① 구속력 없음 ② 직권조정 불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입연도별 안정성과 균형성이 높으며, 수입의 근거·종류·형태가 단순하다.
- ② 세외수입 중 재산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과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전자는 경상적 수입이고 후자는 임시적 수입이다.
- ③ 세외수입 중 사용료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개별적으로 특수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이다.
- ④ 서비스 이용의 혼잡 방지와 자원 절약의 장점이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2021 7급 선행정학 p.558

정답 및 해설

답 ④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세외수입 중 경상세외수입과 임시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은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또한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주의(응유주의)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 이용의 혼잡 방지와 자원 절약의 장점이 있다.

- ☑ ① [×]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모든 자체수입으로서 다양하고 불규칙하다.
- ② [×]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적 수입, 재산임대수입은 경상적 수입이다.
- ③ [×] 특별한 이익을 받은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은 사용료가 아니라 부담금이다. 사용료란 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사용 대가를 의미한다.

☑ 세외수입의 종류

실질적 세외수입	경상적 수입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부담금, 사업장 수입(경영수익사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일반회계
	사업수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하철, 주택사업, 공영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	특별회계
명목적 세외수입	임시적 수입	재산매각수입, 융자금 회수, 이월금, 기부금, 융자금, 전입금, 부담금, 차입금, 잡수입,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	일반회계
	사업외 수입	이월금, 융자금, 전입금,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기타	특별회계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 ㄴ.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ㄷ. 국고보조사업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2021 7급 선행정학 p.634

정답 및 해설

답 ④

ㄱ, ㄴ, ㄷ 모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 ㄱ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 ㄴ [○]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ㄷ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안건 중 하나로 맞는 지문이다.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안건(지방재정법 제27조의2)

1.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3.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5.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